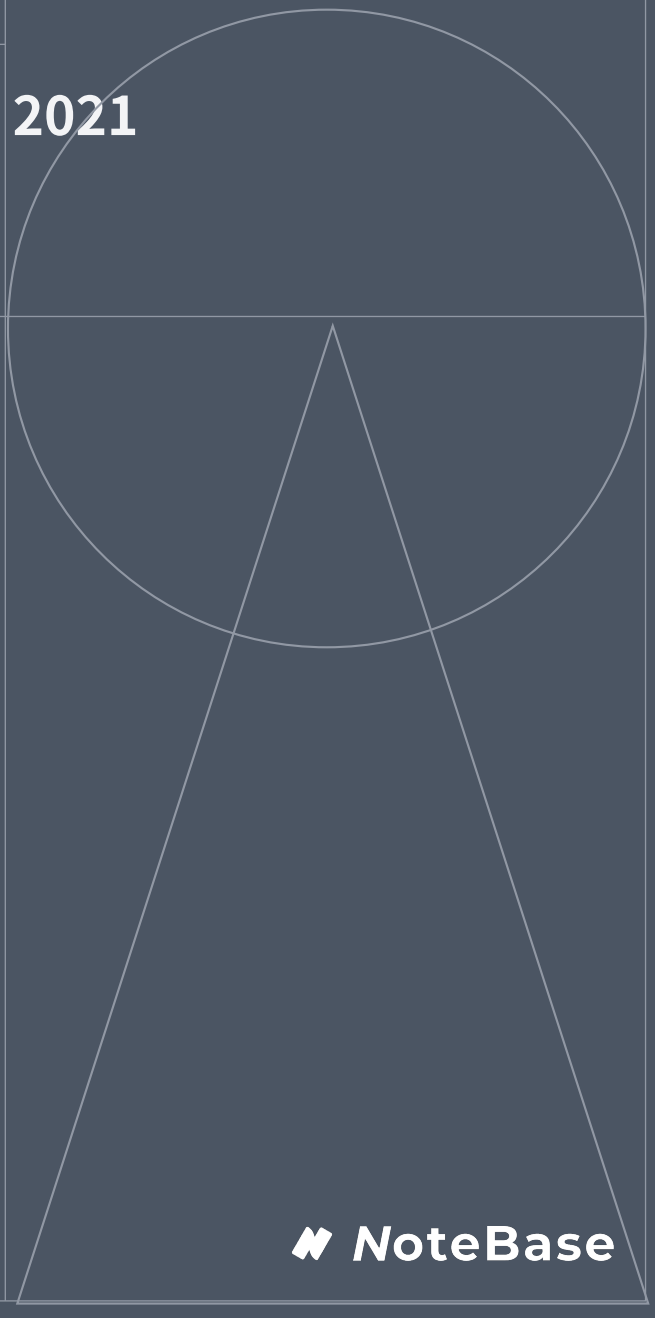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21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21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21**

**문 1. <보기>는 정치를 바라보는 갑(甲), 을(乙)의 관점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 정치는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을(乙): 직장이나 가족 등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① 갑(甲)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② 을(乙)의 관점은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이라고 본다.
③ 갑(甲)에 비해 을(乙)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④ 갑(甲)과 달리 을(乙)의 관점은 정치 활동이 소수의 통치 엘리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본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갑은 정치를 **국가의 고유한 활동**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형성되기 전 집단에서 이루어진 갈등 조정이나 의사 결정은 정치로 설명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갑은 국가의 정치 권력 획득·유지·행사에 주목하는 좁은 의미의 정치 관점이다. 을은 직장이나 가족을 비롯한 여러 사회 집단에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 관점이다.

① O: 갑은 정치가 성립하는 범위를 **국가의 활동으로 한정**한다.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도 집단 구성원 사이의 갈등 조정이나 공동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갑의 관점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정치로 설명할 수 없다.

② X: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보는 것은 **갑의 관점**이다. 을은 국가뿐 아니라 직장이나 가족 등에서 이루어지는 갈등 조정도 정치로 본다.

③ X: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에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난다. 이를 정치 현상에 포함하는 을의 관점이 갑의 관점보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하다**.

④ X: 을은 정치 활동의 주체를 **소수의 통치 엘리트로 한정하지 않는다**. 직장이나 가족에서 구성원들이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는 활동도 정치로 보므로, 일반 사회 구성원도 정치 활동의 주체가 된다.

NoteBase

**문 2. <보기>는 갑(甲)국의 현행 선거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일부이다. 현행 선거법과 비교하여 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지역구 의원 총수는 200명으로 변동이 없다.)**

<보기>

| | |
|---|---|
| 현행 | 제21조 하나의 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회 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
| 개정안 | 제21조 하나의 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회 의원의 정수는 2~4인으로 한다. |

① 총 선거구 수가 증가한다.

②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③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의회 구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다수당의 출현 가능성이 커져 정국 안정에 유리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던 소선거구제를 2~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소수 정당의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의회 구성에 반영되기 쉽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현행 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고, 개정안은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이다. 지역구 의원 총수는 두 제도 모두 200명이다.

① X: 의원 총수가 같은 상태에서 선거구마다 선출하는 의원 수가 늘어나므로 **총 선거구 수는 감소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200개의 선거구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한 선거구가 여러 의원을 선출하므로 선거구 수가 200개보다 적어진다.

② X: 사표는 낙선한 후보에게 던진 표처럼 당선자 결정에 반영되지 못한 표를 말한다.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명만 당선되므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가 사표가 되기 쉽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여러 후보가 당선될 수 있어, 현행 제도보다 **사표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③ O: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면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정당 외에 소수 정당의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여러 정치적 입장을 가진 유권자의 대표가 의회에 진출하여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④ X: 다수당의 출현과 정국 안정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소선거구제**이다. 소선거구제는 큰 정당이 여러 선거구에서 승리하여 의석을 확보하기 쉽다. 반면 개정안의 중·대선거구제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에 유리하므로 여러 정당으로 의석이 분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NoteBase

**문 3. <보기>에서 강조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사회·문화 현상의 발생 과정과 원인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면 안 된다. 또한 자신이 연구 절차나 방법, 연구 윤리 등을 제대로 지키며 탐구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②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 검증하기 전에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인다.
③ 사회·문화 현상은 그 현상이 발생한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
④ 현상의 이면에 담겨 있는 발생 원인이나 원리를 능동적으로 살펴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넘어 **이면의 원인과 원리를 살피고**, 자신의 연구 과정도 되짚어 보는 것은 **성찰적 태도**이다. 보기의 두 문장은 각각 탐구 대상과 연구자 자신의 탐구 활동을 깊이 검토할 것을 강조한다.

**공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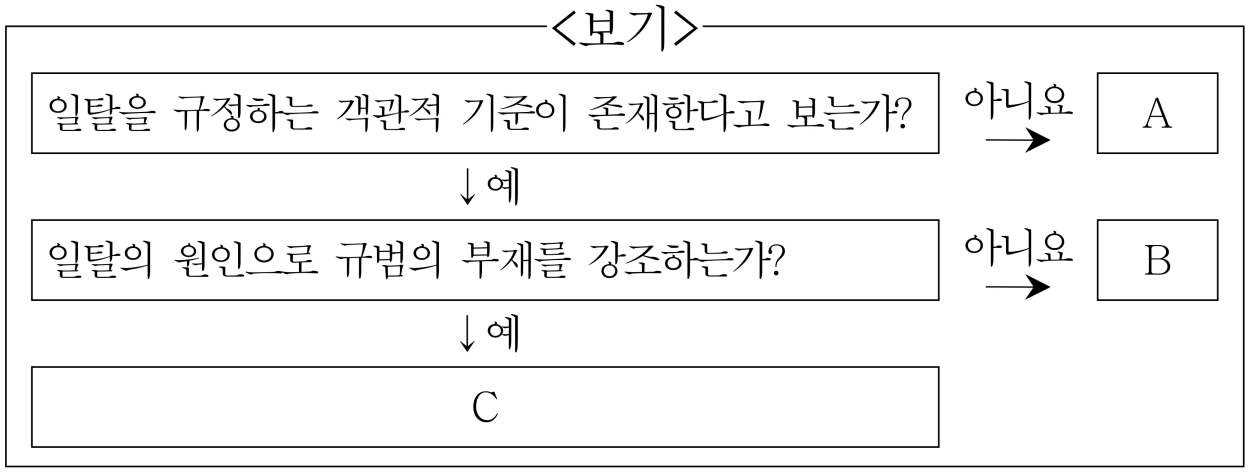
성찰적 태도는 사회·문화 현상의 표면적인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면의 원인과 원리를 깊이 살피는** 태도이다. 또한 연구자 스스로 자신의 탐구 과정이 적절한지 반성적으로 점검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보기의 '발생 과정과 원인이 복잡하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면 안 된다'는 말은 현상의 이면을 능동적으로 탐구하라는 뜻이다. '연구 절차나 방법, 연구 윤리 등을 제대로 지키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말은 **자신의 연구 활동도 점검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다. 따라서 현상의 이면에 담긴 발생 원인이나 원리를 능동적으로 살펴본다는 설명이 보기에 부합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검증 전의 설명을 가설로 받아들이는 것, 발생 맥락에 따른 의미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각각 관찰의 방식·검증 여부·맥락에 초점을 두므로, 보기에서 강조한 성찰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지 못한다.

NoteBase

**문 4. <보기>는 일탈 이론을 A~C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이론 중 하나이다.)**

<보기>




① A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② B는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일탈 행동을 학습한다고 본다.

③ C는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과의 접촉 차단을 강조한다.

④ B는 A, C와 달리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범의 정립을 강조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B는 일탈의 객관적 기준을 인정하면서 규범의 부재를 주된 원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이 이론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 행동의 방법과 이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학습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도식에서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A는 낙인 이론이다. 낙인 이론은 어떤 행동이 그 자체로 일탈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부정적 규정과 사회적 반응에 따라 일탈로 규정된다고 본다. 객관적 기준을 인정하는 두 이론 중 규범의 부재를 강조하지 않는 B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고, 이를 강조하는 C는 아노미 이론이다.

① X: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일탈은 A가 아니라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설명한다. 사회가 강조하는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할 합법적 수단 사이에 괴리가 있으면, 목표를 받아들이면서도 비합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일탈이 나타날 수 있다. A의 낙인 이론은 사회적 낙인으로 일탈자라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일탈이 지속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② O: B의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 행동도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된다고 본다.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일탈의 기술뿐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가치관과 태도도 배우게 된다는 설명이다.

③ X: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여 일탈의 학습을 줄이는 대책은 C가 아니라 **B의 차별적 교제 이론**에 해당한다. C의 아노미 이론은 규범의 부재나 혼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 등 사회 구조적 조건에서 일탈의 원인을 찾는다.

④ X: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범의 정립은 B가 아니라 **C 중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부합하는 대책이다. 뒤르켐은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기존 규범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상태에 주목하므로, 구성원의 행동을 이끌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B의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을 학습하는 교제 관계의 개선을 강조한다.

NoteBase

**문 5. <보기>는 형벌의 종류를 정리한 표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종류 | 예 |
|---|---|
| ( ㉠ ) | 사형 |
| ( ㉡ ) | 징역, ( ㉢ ), 구류 |
| 명예형 | ( ㉣ ), 자격 정지 |
|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

① ㉠은 생명형이다.

② ㉡은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을 의미한다.

③ ㉢은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류와 구분된다.

④ ㉣에 의해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이 박탈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은 금고이다. 금고와 구류는 모두 **정역을 의무로 부과하지 않는다**. 정역, 즉 정해진 노역의 의무 유무로 구분되는 것은 **징역과 금고**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은 사형을 포함하는 생명형이다.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므로 생명형으로 분류한다.

② O: ㉡은 징역·금고·구류를 포함하는 자유형이다.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을 뜻한다.

③ X: ㉢은 자유형 중 금고이다. 형법 제67조·제68조에 따르면 징역은 정해진 노역인 정역에 복무하게 하지만, **금고와 구류는 모두 정역을 의무로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류와 구분된다'를 '징역과 구분된다'로 고쳐야 한다. 금고와 구류는 기간에서 차이가 난다.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며 유기금고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인 반면,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형법 제42조·제46조).

④ O: ㉣은 명예형 중 자격상실이다. 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상실한다. 자격정지가 일정 기간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6. <보기>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다.)**

<보기>
상속권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갑(甲)은 해당 민법 규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A에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갑(甲)은 B에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A는 갑(甲)의 신청 없이 ㉠을 할 수 있다.
② 갑(甲)은 소송 중이 아니라도 ㉠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甲)이 청구한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④ A, B 모두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A인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을 제청하는 A는 법원이고, ㉡을 심판하는 B는 헌법재판소이다. 지문에는 '법률에 어긋난다'고 쓰여 있으나, 위헌 법률 심판의 심사 기준은 헌법이다. 아래 판단은 지문에 명시된 심판 절차에 따른다.

① O: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다. 따라서 갑의 신청이 없어도 A는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갑이 법원에 하는 것은 제청의 신청이고, 헌법재판소에 실제로 제청하는 주체는 법원이다.

② X: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필요하다. 즉 법원에 구체적인 소송이 계속 중이고,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법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갑은 소송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 중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관하여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③ X: 갑은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기각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받는 절차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같은 조 제1항의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과 구별된다.

④ X: 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헌법상 임명 절차를 거친다. 헌법 제104조는 법관의 임명을, 제111조 제2항·제3항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국회·대법원장의 구성 참여를 규정한다. 따라서 A와 B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기관이 아니라, 이러한 구성 절차를 통해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기관이다.

NoteBase

**문 7. <보기>의 표는 A 민족과 B 민족 간의 교류로 인한 두 민족의 문화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구분 | A 민족 | B 민족 |
|---|---|---|
| T 시기 | ○, □, △ | ●, ■, ▲ |
| T+1 시기 | ○, ●, □, △ | ●, ■, □, ▲ |
| T+2 시기 | ◎, ■, △ | ●, ■, △ |

* ○, □, △는 순서대로 A 민족의 의복 문화, 음식 문화, 주거 문화임.
* ●, ■, ▲는 순서대로 B 민족의 의복 문화, 음식 문화, 주거 문화임.
* ◎는 ○의 성격과 ●의 성격을 모두 지니면서 새로운 성격이 가미된 의복 문화임.

① T+1 시기 A 민족은 B 민족과 달리 문화 공존(병존)이 나타났다.

② T 시기에서 T+1 시기로 가면서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

③ T 시기 이후 T+2 시기에 이르기까지 A 민족과 달리 B 민족의 의복 문화에서만 자문화 요소가 유지되고 있다.

④ T 시기에 비해 T+2 시기의 A 민족 문화 변동에서 의복 문화는 음식 문화, 주거 문화와 달리 문화 융합이 발생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T+2 시기 A 민족의 의복 문화 ◎는 기존의 ○와 외래의 ●가 결합하여 새로운 성격이 더해진 **문화 융합**이다. 음식 문화는 □에서 ■로 대체되었고, 주거 문화는 △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T+1 시기 A 민족의 의복에는 ○와 ●가, B 민족의 음식에는 ■와 □가 함께 나타난다. 기존 문화와 외래문화가 각각의 성격을 유지하며 나란히 존재하는 문화 공존(병존)은 **두 민족 모두**에서 나타났다.

② X: 두 민족 간의 교류를 통해 A 민족에는 B 민족의 의복 문화 ●가, B 민족에는 A 민족의 음식 문화 □가 들어왔다. 이는 문화 전파라는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다. 내재적 요인은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발명이나 발견을 말한다.

③ X: A 민족의 의복 문화는 T+1 시기에 ○와 ●가 공존하고, T+2 시기에 두 문화의 성격을 모두 지닌 ◎로 바뀐다. 따라서 문화가 융합된 뒤에도 **A 민족의 자문화 요소가 유지**된다. B 민족도 의복 문화 ●뿐 아니라 음식 문화 ■를 T+2 시기까지 유지하므로, B 민족의 의복 문화에서만 자문화 요소가 유지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O: T 시기의 A 민족 의복 문화 ○는 T+2 시기에 ◎로 바뀌었다. 표의 설명에 따르면 ◎는 ○와 ●의 성격을 모두 지니면서 새로운 성격이 더해진 의복 문화이므로 **문화 융합**에 해당한다. 음식 문화는 □가 사라지고 외래문화인 ■로 대체된 문화 동화이며, 주거 문화는 △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세 영역 중 문화 융합이 나타난 것은 의복 문화이다.

NoteBase

**문 8.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서로 다른 민법의 원칙에 해당한다.)**

<보기>
· A는 ㉠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 ㉡ 자기 책임의 원칙은 B로 수정되었다.
· C는 D로 수정·보완되었다.

① ㉠은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
② ㉡에 따라 과실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C는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D는 C와 달리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계약 공정의 원칙은 형식적으로 자유롭게 맺은 계약이라도 **내용의 공정성**을 요구한다. 경제력 차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A인 계약 자유의 원칙은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체결 여부와 내용 등을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경제력 차이가 크면 자유로운 합의의 형식을 갖추어도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 내용의 공정성**을 요구하여 이러한 문제를 방지한다.

② X: ㉡인 자기 책임의 원칙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위법하게 가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원칙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B인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③ X: C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근대 민법의 원칙이다. 소유권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이를 수정·보완한 D인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④ X: D인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도 C와 마찬가지로 **개인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다만 소유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C와 D의 차이는 사적 지배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소유권의 공공성과 제한을 강조하는 데 있다.

NoteBase

**문 9. <보기 1>의 빈곤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 B는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보기 1>
⊙ 학습 주제: 빈곤 유형
1. A
-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곤란한 상태
-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A 가구로 분류함
2. B
-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
-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에 미달하는 가구를 B 가구로 분류함
<보기 2>
ㄱ. A에 해당하는 가구는 B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중위 소득이 높아지면 B의 빈곤선도 높아진다.
ㄷ. A는 주로 선진국에서, B는 주로 저개발국에서 나타난다.
ㄹ. A와 B 모두 우리나라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 빈곤의 유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B는 **중위 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삼으므로 중위 소득이 오르면 빈곤선도 오른다. A와 B는 모두 개인이 느끼는 가난이 아니라 **소득을 일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판별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A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 B는 해당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이다. 제시문에서는 각각 최저 생계비와 중위 소득의 50%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ㄱ. X: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동시에 해당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낮으면서 중위 소득의 50%에도 미달하면 두 유형 모두에 해당한다. 따라서 A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ㄴ. O: 중위 소득은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B의 빈곤선은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인 50%**이므로, 중위 소득이 높아지면 그 기준 금액도 높아진다.

ㄷ. X: 최소한의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절대적 빈곤은 일반적으로 **저개발국에서 더 두드러진다**. 상대적 빈곤은 사회 구성원 간 생활 수준의 격차에 주목하므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난다**. A를 주로 선진국의 문제로, B를 주로 저개발국의 문제로 연결한 설명은 두 유형의 특징을 뒤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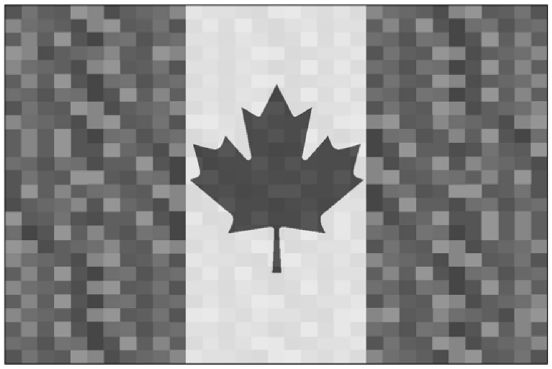
ㄹ. O: 제시문의 A는 최저 생계비, B는 중위 소득의 50%라는 **객관적인 소득 기준**으로 분류한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한다는 뜻이며, 개인의 주관적인 빈곤감으로 판별한다는 뜻이 아니다.

옳은 보기는 ㄴ과 ㄹ이며, 이를 묶은 선택지는 ③이다.

NoteBase

**문 10. <보기>와 같은 다문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캐나다는 1971년 다문화주의를 선언하고 각각의 인종이나 민족이 자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캐나다 사회에 참여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여러 개의 조각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작품이 되는 '모자이크'와 같다고 하여 모자이크 정책이라고 한다.

①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② 이민자의 문화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책이다.

③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자세를 중시하는 정책이다.

④ 인위적으로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각 인종이나 민족이 자신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한 채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므로,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을 중시한다.

NoteBase

**공통 해설**

모자이크 정책은 서로 다른 인종과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문화 다원주의**에 바탕을 둔다. 제시문에서 '자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는 문화적 정체성의 보존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캐나다 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차별 없는 사회 참여를 뜻한다. 모자이크의 각 조각이 고유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듯,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을 중시한다.

이 정책의 기준은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하거나 여러 문화를 인위적으로 하나의 문화로 통일하려는 정책과 구별된다. 이민자가 기존의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동화 정책과도 구별되므로, 제시문의 정책은 이민자의 문화 정체성을 훼손하기보다 보존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NoteBase

**문 11. <보기>의 A, B는 국제 연합(UN)의 주요 기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A는 갑(甲)국과 을(乙)국 양국이 제기한 카리브해 영유권 분쟁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갑(甲)국이 을(乙)국보다 3배 많은 해양 영토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 B는 병(丙)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무산될 수 있다.

① A는 국제 연합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재판할 수 있다.
② A는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한 제소가 있어야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B는 의사 결정 방식에서 강대국의 논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④ A는 B와 달리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는 두 기관의 권한을 뒤바꾸었다. A인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 법적 분쟁을 재판하며, **군사적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B인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국가 간 영유권 분쟁을 판결한 A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고, 제재 결의안을 표결하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B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① O: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국가가 국제 연합 회원국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35조에 따라 **비회원국도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② O: 국제 사법 재판소의 국가 간 분쟁 재판은 **당사국의 관할권 수락**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당사국의 동의 없이 어느 국가에나 일방적으로 재판을 강제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 규정 제36조에 따른 동의는 해당 분쟁에 관한 특별 합의로 할 수도 있고, 조약이나 관할권 수락 선언을 통해 미리 표시할 수도 있다.

③ O: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제재 결의와 같은 비절차적 사항에는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작용한다. 국제 연합 헌장 제27조에 따라 상임 이사국 한 나라가 반대하면 이러한 결의는 채택되지 못하므로, 강대국인 상임 이사국의 이해관계가 의사 결정에 크게 반영될 수 있다. 보기에서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 결의안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례이다.

④ X: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 법적 분쟁을 판단하는 사법 기관으로,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군사적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국제 연합 헌장 제42조는 비군사적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에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NoteBase

**문 12. <보기>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소득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_____(가)_____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_____(나)_____로 구성된다.

① (가) 중 이전 소득에는 공적 연금이 해당한다.
② (가) 중 사업 소득에는 배당금이 해당한다.
③ 연금 일시금은 (가)에 해당한다.
④ 예산 수립 시에는 (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공적 연금은 직접적인 생산 활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 아니라 **이전 소득**이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의 **경상 소득**에 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가)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 소득이고, (나)는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 소득이다. 경상 소득에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등이 포함된다.

① O: 공적 연금은 직접적인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적 제도를 통해 이전받는 **이전 소득**이다. 정기적으로 받는 공적 연금은 경상 소득인 (가)에 해당한다.

② X: 배당금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기업의 이익을 배분받는 소득이므로 **재산 소득**이다. 사업 소득은 스스로 사업을 경영하여 얻는 소득이다.

③ X: 연금 일시금은 정기적으로 나누어 받는 연금과 달리 한 번에 받는 소득이므로 **비경상 소득인 (나)**에 해당한다.

④ X: 예산은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계획하는 것이다.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비경상 소득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안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상 소득인 (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oteBase

**문 13. <보기 1>의 밑줄 친 글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허생전(許生傳)』에서 허생은 물건을 사들여 쌓아 두었다가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져 시장 가격이 오르면 내다 파는 형식으로 많은 돈을 번다. 허생이 사들인 물건은 과일과 말총이었는데, 과일은 제사나 잔치에 꼭 필요한 물건이었고, 말총은 양반의 필수품인 갓을 만드는 재료였다. 따라서 과일과 말총은 아무리 가격이 비싸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보기 2>
ㄱ.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ㄴ. 일반적으로 대체재가 적은 상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ㄷ. 과일과 말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는 작다.
ㄹ. 생산 기간이 길거나 저장의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가격이 올라도 구매를 크게 줄이기 어려운 필수품은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다. 대체재가 적을수록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 어려워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낸다. 밑줄은 과일과 말총이 당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어서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뜻이다.

ㄱ X: 가격이 올라도 계속 구매해야 하므로 수요량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크게 반응하는 탄력적 수요와 구별된다.

ㄴ O: **대체재가 적으면** 가격이 올라도 다른 상품으로 소비를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수요량을 크게 줄이기 어려워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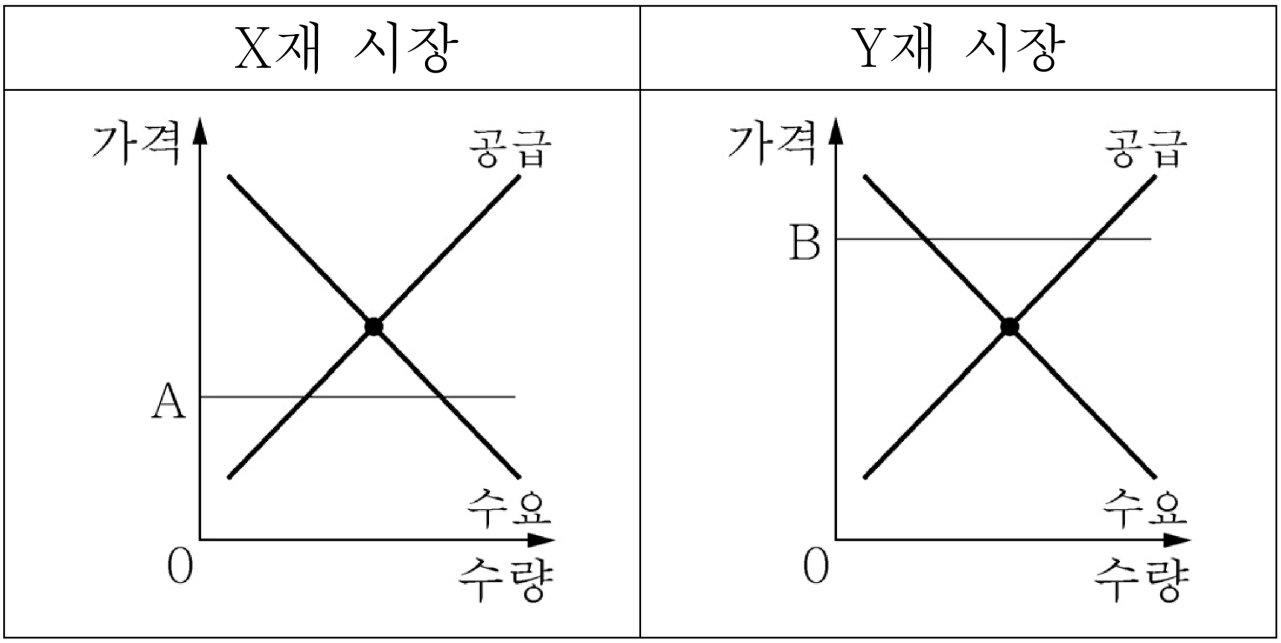
ㄷ O: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작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절댓값으로 나타내므로 그 값은 **1보다 작다**.

ㄹ X: 생산 기간과 저장의 어려움은 소비자의 구매 반응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생산 기간이 길면 단기간에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고, 저장이 어려우면 재고를 이용해 공급량을 조절하기 어려워 공급이 가격에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다. 이를 밑줄의 수요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는 없다.

옳은 분석은 ㄴ, ㄷ으로, ②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4. 정부가 각각 A와 B로 가격을 정한 X재 시장과 Y재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A의 사례로 최저임금제를 들 수 있다.

② X재 시장에서는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보다 크다.

③ Y재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④ B는 정부가 생산자(공급자) 보호를 위해 가격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Y재 시장의 B는 수요·공급 곡선이 만나는 균형점보다 높은 가격이다. 이보다 낮은 가격의 거래를 막는 **최저가격제**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X재 시장의 A는 균형가격보다 낮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고 가격제**에 해당한다. A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가격 상한선이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 가격제의 사례이다.

② X: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에서 실제 지불액을 뺀 것이고, 생산자 잉여는 실제 수입에서 생산자가 받으려는 최소 금액을 뺀 것이다. X재 시장에서 가격이 A로 정해지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어 거래량은 공급량으로 제한된다. 그 거래량까지 A선 위·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이 소비자 잉여이고, A선 아래·공급 곡선 위의 면적이 생산자 잉여이다. 그림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보다 크다**.

③ X: Y재 시장의 B는 균형가격보다 높다. B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므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초과 수요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로, 그림에서는 가격이 A로 정해진 X재 시장에서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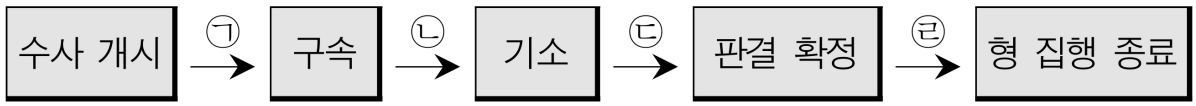
④ O: Y재 시장의 B는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 하한선**이다. 정부가 B보다 낮은 가격의 거래를 금지하여 가격 하락으로부터 생산자(공급자)를 보호하는 최저 가격제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5. <보기>는 형사 절차의 진행과정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은 을(乙)을 폭행하였고 을(乙)의 고소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다.




① ㉠단계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이 형사 재판을 청구한다.

② 국선 변호인 선임은 ㉡단계 이후에 가능하다.

③ ㉢단계에서 갑(甲)이 구속될 경우 보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단계와 달리 ㉡단계에서의 구금은 형사 보상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은 기소 후 판결 확정 전이므로 갑은 **피고인**이다.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석방을 허가하는 **보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도식에서 ㉠은 수사 개시 후 구속 전, ㉡은 구속 후 기소 전, ㉢은 기소 후 판결 확정 전, ㉣은 판결 확정 후 형 집행 종료 전의 단계이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소 전의 피의자는 기소 후 피고인이 된다.

① X: 형사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의 주체는 경찰관이 아니라 **검사**이다.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공소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정한다.

② X: 국선변호인 선정은 **기소 전에도 가능**하다. ㉠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거나 ㉡에서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 또는 판사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소 전인 ㉡단계가 지난 뒤에야 가능하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16조에 따른다.

③ O: ㉢은 기소 후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이므로 갑은 피고인이다.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보석은 보증금 납입 등 법원이 정하는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갑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④ X: 형사 보상은 **기소 전의 구금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에서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기소된 경우에도, 이후 무죄재판이 확정되면 그 수사 단계의 미결구금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에서 형을 집행받은 경우에도 재심 등으로 무죄재판이 확정되면 그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상 가능 여부를 기소 전후만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근거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항이다.

NoteBase

**문 16. <보기>는 사회 집단을 접촉 방식과 결합 의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가), (나)의 사례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 분류 기준 | | 결합 의지 | |
|---|---|---|---|
| | | 본질적 의지 | 선택적 의지 |
| 접촉 방식 | 직접적인 대면 접촉 | (가) | |
| | 간접적 접촉 | | (나) |

① (가): 가족, (나): 정당

② (가): 가족, (나): 전통 사회의 마을 공동체

③ (가): 학교, (나): 친족

④ (가): 회사, (나): 또래 집단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족은 친밀한 대면 관계와 자연스러운 유대를 바탕으로 하므로 **1차 집단이자 공동 사회**이다. 정당은 정치적 목표를 위해 의도적으로 조직되므로 **2차 집단이자 이익 사회**이다.

**빈칸별 해설**

(가): 표에서 '직접적인 대면 접촉'과 '본질적 의지'가 만나는 칸이다. 접촉 방식으로는 친밀하고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1차 집단, 결합 의지로는 자연스러운 유대에 바탕을 둔 공동 사회에 해당한다. 가족은 혈연과 애정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생활하므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학교와 회사는 교육이나 이윤 추구 같은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조직된 2차 집단이자 이익 사회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나): 표에서 '간접적 접촉'과 '선택적 의지'가 만나는 칸이다. 접촉 방식으로는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수단적인 관계를 맺는 2차 집단, 결합 의지로는 공동 목표를 위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정당은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 등의 목표를 위해 조직하므로 **2차 집단과 이익 사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전통 사회의 마을 공동체, 친족, 또래 집단은 친밀한 대면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1차 집단의 사례이므로 (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에 가족, (나)에 정당을 짝지은 ①이 두 분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NoteBase

**문 17. <보기>의 정치 참여 집단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현대 민주 정치의 중요한 정치 행위자로 A와 B가 있다. A는 그들의 이익을 정치 현장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B를 매개체로 이용하고, B도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한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A와 밀접한 상호 관계를 맺는다. B는 A로부터 정책 쟁점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견해를 획득하고, 다원적 사회에 분산돼 경쟁 관계에 있는 여러 A는 B와 연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형성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행사한다.

① B는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② A는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③ B는 A와 달리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④ A는 B와 달리 정치 사회화를 담당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치에 필요한 지식·가치·태도를 배우게 하는 **정치 사회화는 이익 집단과 정당 모두의 기능**이다. 따라서 이익 집단인 A만 정치 사회화를 담당한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선지별 해설**

A는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이익 집단이고, B는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지지 기반을 넓히는 정당이다.

① O: 정당은 **의회와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여당은 의회에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의회에서 수렴한 요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

② O: 이익 집단은 특정 직업·산업·계층 등 **구성원의 공통된 특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제시문에서 여러 A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형성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③ O: 정당은 정권 획득과 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므로, 활동과 정책의 결과에 대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유권자는 지지를 철회하거나 다른 정당에 투표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익 집단은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정당처럼 정권을 담당하고 선거로 평가받는 직접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④ X: 정치 사회화는 개인이 정치에 관한 지식·가치·태도를 배우는 과정이다. 이익 집단은 회원 교육이나 정책 홍보를 통해, 정당은 정치 교육이나 선거 운동을 통해 이 과정에 기여한다. 따라서 정치 사회화는 A만의 기능이 아니라 **A와 B 모두의 기능**이다.

NoteBase

**문 18.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인구 구성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 지표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실업률 | 고용률 | 경제 활동 참가율 |
|---|---|---|---|
| 취업자 → ㉠ | 상승 | 하락 | 불변 |
| ㉡ → 비경제 활동 인구 | 하락 | 불변 | 하락 |
| 비경제 활동 인구 → 실업자 | 상승 | ㉢ | 상승 |

① ㉠: 실업자, ㉡: 취업자, ㉢: 상승

② ㉠: 실업자, ㉡: 실업자, ㉢: 불변

③ ㉠: 비경제 활동 인구, ㉡: 실업자, ㉢: 불변

④ ㉠: 비경제 활동 인구, ㉡: 취업자, ㉢: 하락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취업자가 실업자로 바뀌면 **경제 활동 인구는 그대로**이고, 실업자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바뀌면 취업자 수는 그대로이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실업자로 바뀌어도 취업자 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할 때 **고용률은 불변**이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다.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경제 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이다. 이 문제에서는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다.

㉠ 실업자: 취업자가 실업자로 바뀌면 취업자 수는 줄고 실업자 수는 늘지만, 두 집단의 합인 **경제 활동 인구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하며 경제 활동 참가율은 불변이다. 취업자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바뀐다면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 참가율도 하락하므로 표와 맞지 않는다.

㉡ 실업자: 실업자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바뀌면 **취업자 수는 그대로이고 실업자 수만 줄어든다**. 이에 따라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하락한다. 취업자 수가 같으므로 고용률은 불변이고,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 경제 활동 참가율은 하락한다. 취업자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바뀐다면 고용률도 하락하므로 표와 맞지 않는다.

㉢ 불변: 비경제 활동 인구가 실업자로 바뀌면 실업자 수와 경제 활동 인구는 늘어나지만 **취업자 수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률과 경제 활동 참가율은 상승하지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인 고용률은 불변이다.

㉠은 실업자, ㉡은 실업자, ㉢은 불변이므로 ②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보기>의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보기>

표의 ㈎, ㈏는 각각 갑(甲)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 중 하나를 나타낸다. 단, 기준 연도는 2017년이며,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단위 : 억 달러)

| 구분 | 연도 | | |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 80 | 100 | 120 |
| ㈏ | 120 | 100 | 80 |

① 2019년의 물가 수준은 2017년보다 낮다.

② (가)가 실질 GDP라면 2018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2017년보다 높다.

③ (가)가 명목 GDP라면 2019년의 경제 성장률은 양(+)의 값을 가진다.

④ (나)가 실질 GDP라면 2020년의 물가 상승률은 음(-)의 값을 가진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가)가 실질 GDP라면 2018년에는 명목 GDP가 120억 달러, 실질 GDP가 80억 달러이다.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는 150**으로, 기준 연도인 2017년의 100보다 높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명목 GDP는 해당 연도의 가격으로, 실질 GDP는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생산액을 평가한 것이다.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실질 GDP× 100이며, 기준 연도인 2017년에는 100이다.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로 판단한다.

① X: 2019년에는 (가)와 (나)가 모두 100억 달러이므로, 어느 것이 명목 GDP이든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다. 따라서 2019년의 물가 수준은 **2017년과 같다**.

② O: (가)가 실질 GDP라면 (나)가 명목 GDP이다. 2018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frac{120}{80} \times 100 = 150$이므로, 2017년의 100보다 높다. 이는 2018년의 물가 수준이 기준 연도보다 **50% 높다**는 뜻이다.

③ X: (가)가 명목 GDP라면 실질 GDP는 (나)이다. 실질 GDP가 2018년 120억 달러에서 2019년 100억 달러로 감소했으므로, 2019년의 경제 성장률은 **음(-)의 값**이다. 명목 GDP가 증가했더라도 실질 생산 규모가 커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④ X: (나)가 실질 GDP라면 (가)가 명목 GDP이다. 2019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고, 2020년에는 $\frac{120}{80} \times 100 = 150$이다. 물가 수준이 전년보다 50% 높아졌으므로, 2020년의 물가 상승률은 **양(+)의 값인 50%**이다.

NoteBase

**문 20. <보기>는 미국 달러화 대비 각국 통화 가치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국제 거래는 미국 달러화로만 이루어진다.)**

<보기>
갑(甲)국 10%
을(乙)국 −5%
병(丙)국 −10%
정(丁)국 5%

①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야 하는 갑(甲)국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② 병(丙)국 통화 대비 을(乙)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였다.

③ 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병(丙)국 기업의 대금 지급 부담이 증가하였다.

④ 정(丁)국 기업이 상환해야 하는 미국 달러화 표시 채무 부담이 증가하였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병국 통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가 10% 하락하여, 같은 달러 금액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병국 통화**가 필요해졌다. 따라서 미국에서 수입한 부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부담이 증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보기의 수치는 각국 통화 1단위가 지닌 달러화 가치의 변화율이다. 국제 거래가 달러화로 이루어지므로, 같은 달러 금액을 지급할 때 자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필요한 자국 통화는 줄고, 가치가 하락하면 늘어난다.

① X: 갑국 통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는 10% 상승하였다. 같은 달러 금액의 학비를 보내는 데 필요한 갑국 통화가 줄어들므로, 학부모의 부담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② X: 을국 통화는 달러화 대비 5%, 병국 통화는 10% 가치가 하락하였다. 을국 통화의 가치 하락 폭이 더 작으므로, 을국 통화 1단위로 바꿀 수 있는 병국 통화의 양은 늘어난다. 따라서 병국 통화 대비 을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하였다.

③ O: 병국 통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는 10% 하락하였다. 병국 통화 1단위로 살 수 있는 달러가 줄어들어, 같은 달러 금액의 수입 대금을 지급하려면 **더 많은 병국 통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병국 기업의 대금 지급 부담이 증가한다.

④ X: 정국 통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는 5% 상승하였다. 상환할 채무의 달러 금액이 같다면 이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국 통화는 줄어든다. 따라서 달러화 표시 채무의 자국 통화 환산 상환 부담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NoteBase